

토론

3

협동조합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몇 가지 소고

남 원 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팀장)

협동조합의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몇 가지 소고

남원근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협동조합팀장)

지난해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설립된 협동조합들을 방문해보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조합 활동이 이뤄지는 곳은 많지 않다. 적지 않은 수가 소상공인 진흥원의 소상공인 협업화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설립됐으나 자금지원이 늦어지며 개점휴업상태를 유지하거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 운영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생각지 않고 설립해놓으면 지원이 있을 것이란 막연한 심리 혹은 동아리 수준에서의 사업모색차원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1. 협동조합은 권리와 함께 의무의 복합체

충남의 경우 새로운 조합들 중 5백만 원 이하 출자금이 37%, 1천만 이하가 23% 등 1천만 이하가 전체적으로 60%에 이르고 있다. 출자금 규모가 조합의 성공요소의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경영수준에 도달하기엔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스페인 몬드라곤의 경우 출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비교가 어렵지만, 조합원 정직원이 되기 위해 1인당 900만~13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협동조합 접근은 매우 느슨한 것이다. 이는 조합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에 대한 자각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송두범 센터장의 실태 조사결과에서 협동조합7원칙 준수여부와 관련해 민주성/개방성/자발성 원칙에 대해서는 높지만 조합간 협력/독립성/조합원정보제공/증자참여에 대해서는 원칙이 낮다는 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지역들을 둘러보면 이러한 조합원의 의무에 대한 자각이 없어 파산하거나 흐지부지된 사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협동조합 운영을 방관하거나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다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의무에 대한 자각에서 협동조합사업을 위한 기금 등이 여실히 필요하

고 지속가능한 것이지, 무자각 상태에서의 간접지원은 직접지원과 마찬가지로 협동조합의 생존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존적 관계를 만들 뿐이다.

따라서 1인1표, 민주적 통제라는 ‘동업의 시스템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것 못지않게 협동조합이 가지는 의무적 요소에 대한 학습, 강조가 필요하다. 의무를 이해해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얘기할 수 있다. 즉 조합원 개개인의 의무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협동조합’이란 법인격의 지역사회 공헌만을 얘기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만을 드러낼 뿐이다. 협동조합에서 권리와 의무를 양 날개란 점이 우리 운동에서 망각되면 안 되리라 생각한다.

2. 협동조합의 시작은 조합이 아니라 협동, 유년 청소년 때부터 체화해야

협동조합은 협동을 위한 조직적 형식과 결과이지, 조합을 해야 협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협동조합이 최고선은 아니란 뜻이다. 홍성에서는 협동조합이 아니지만 기본법 협동조합보다 더 협동조합스럽게 운영되는 ‘뜰’과 같은 개인사업자들이 있다.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법인격은 선택일 뿐이다.

결국 문제는 협동이란 가치관과 행위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연 협동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자신들의 가치관으로 체화하도록 하고 있는가 자문해보면 ‘아니다’라는 답을 할 수 밖에 없다. 원주, 홍동 등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역사도 해외에 못지않는데 왜 생태계가 넓어지지 않았는가는 사회적 환경 탓도 크리라 생각한다. 권리의식은 커졌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감에 대해서는 환경이 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정녕 협동조합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한다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에서의 교육, 특히 유년시절부터의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 협동조합 교육과 학습은 상당수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의 체화된 교육과 경험이 이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협동이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 초등·중등교육을 논하기에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 협동조합 운동에서 유년, 청소년을 위한 변변한 협동조합 교재가 아직 없다는 점은 되돌아봐야할 사항이다. 교재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해외에서 보면 유년, 청소년을 위한 협동조합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이는 청소년

년생태교육 등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따라서 대안적인 유년, 청소년 프로그램과 별도로 협동과 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연구되고 실천돼야 협동조합의 생태계가 넓어지고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튼튼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이번 달에 문을 여는 성남 북정고 학교매점협동조합 같이 학생, 학부모, 교사가 같이 참여하는 협동조합 프로그램을 눈여겨보고 있다.

3. 협동조합 역시 기업 ‘법인격’ 이다

국내외 협동조합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돌아보면 왜 협동조합이며, 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등 협동조합에 대한 원칙적 접근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은 ‘어떻게 경영되는지’가 제대로 이해돼야 함을 알 수 있다. 문보경 집행위원장이 인용한 ‘지역을 살리는 협동조합 만들기 7단계’에서 그래그 신부가 강조하는 부분도 이 지점이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협동조합 운동가들이 고민하는 지점이 나온다. 협동조합의 정신은 간데없고 사업의 영위만이 남는 문제점이 그것이다. 지역에서 만나본 협동조합들 중 적지 않은 수가 협동조합을 주식회사와 다른 조합원 참여가 쉽고, 동업의 방어기제가 충실한 또다른 ‘법인격’으로 사고하며 사업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어떤 분들은 중간지원조직들이 협동조합의 경영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하면 성급하다느니, 자칫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경계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에 동의하고 협동조합이란 형태가 이래야 한다는 원칙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한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협동조합 7원칙을 모르고 협동조합을 시작한 사람들과 우리는 만나야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협동조합이란 게 이런 것인데 당신들은 잘못하고 있으니 처음부터 다시 교육받아야 한다”고 하는 게 적절한 일일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도 진행하면서 ‘협동조합의 원칙을 이해하지 않는 한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을 주는 게 협동조합운동적 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협동조합이 성공하려면 협동조합 7원칙을 잘 지키는 것 못지않게 잘 경영돼야 한다. 우리는 몬드라곤에서 노동인민금고기금의 존재를 강조하지만, 기술학교의 존재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다. 혁신과 창의는 또 다른 협동조합 지속가능성의 기

반이며, 경영의 주요요소다. 전 세계, 아니 우리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아니 사회적경제 시스템이 잘 구축됐다 하더라도 혁신과 기술은 협동조합의 중요한 과제다. 정체되면 협동조합조차도 사그러진다. 자본주의적 경쟁력과 다른 의미에서 말이다.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한 이유도 단순히 협동의 기본정신을 잊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혁신과 창의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혁신과 기술은 마케팅이나 회계, 제조기술을 총괄한다. 경영적 측면을 과소평가해서는 결코 협동조합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따라서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경영, 마케팅 요소 등에 대한 ‘계획적 접근’이 필요하다. 원칙에 맞은 경영교육이 필요하다. 중간지원조직이든 협동조합운동이든 이 문제에 대한 협동조합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협)한국협동조합창업경영센터의 일련의 접근은 주목할 만 하다. 이런 접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분들이 많지만, 운동이란 대중의 눈높이, 이해요구 수준에 맞춰줘야 하는 것이다. 대중추수주의로 빠지지 않는 것은 운동가의 몫이기도 하다.